

상표권 넘기고 부랴부랴 뒷수습…혼란 자초한 전남농기원

‘해금골드키위’ 2023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되자 영농법인에 양도
농민 불안감에도 1년 지나 대응…지재처 등록 과정 적절성 논란도
농기원 “상표 디자인만 등록 권유”…영농법인 “알아서 등록하라 해”

키위 품종 ‘해금’을 둘러싼 민간 영농 법인의 상표권 독점 논란(광주일보 1월 6일자 6면)과 관련, 당초 상표권을 갖고 있던 전남농업기술원(전남농기원)의 미흡한 공공 브랜드 자산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농기원이 공공 연구로 개발한 품종인데도 자체 개발한 디자인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민간 법인에 넘기는가 하면, 해당 업체의 상표권 독점 주장으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뒤늦게 대응에 나서면서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도 애초 ‘해금골드키위’에 대한 상표권 등록 불가 입장을 밝혔다가 구두 논의만으로 입장을 바꿔 한 달 만에 상표권 등록을 해주면서 등록 과정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된다.

6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농기원은 지난 2013년 ‘해금 골드키위, 남도의 바다를 품은 행복한 햇살이 키웁니다’라는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한 뒤 2023년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민간 영농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법인 측은 이후 디자인 뿐 아니라 ‘해금 골드키

위’, ‘해금(해금) 골드키위’ 등 명칭에 대한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진행했고 관련 명칭을 쓰는 농민들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농민들 민원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10년 간 브랜드 인지도 제고 목적을 달성했고 해당 법인이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농기원측 입장이지만 공공 브랜드 자산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기존부터 쓰던 상표 디자인만 새로 등록하라고 한 것으로 ‘해금 골드키위’ 명칭까지 등록해 상표권을 독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남농기원은 지난해 11월 30일 불안해하는 유통업체·농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뒤에야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 이미 ‘해금 골드키위’ 명칭 상표권이 등록된 지 1년 넘게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영농 법인 측은 이미 유통업체와 판매자 등 50여 곳을 상대로 수차례 명칭 상표권 침해 경고와 내용



골드키위 품종 중 하나인 ‘해금’의 상표권 등록 문제로 키위 농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남의 한 키위 농가에서 해금골드키위를 수확 중인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증명을 보낸 상태였다.

전남농기원은 지난달에야 명칭 상표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과 의견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남농기원측은 “상표권 출원 이후 이의신청 기

간이 있는데 홈페이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상표권 등록 과정도 석연치 않다.

지재처는 지난해 9월 영농 법인 측에 ‘해금 골드키위’ 출원 상표가 상표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통

지했는데, 한 달 여만에 상표권 등록이 이뤄졌다.

법인 측은 일부 지정상품 삭제, 분할출원을 거쳐 보완서·의견서를 지재처에 보냈다는 입장이지만 애초 지재처가 제시한 등록 불가 항목이 그대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등록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재처는 출원상표로 낸 ‘해금’은 품종명칭인 ‘해금’ (작물·참다래)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냉동 과일’, ‘냉동한 키위’, ‘미가공 과일’, ‘신선한 키위 도매업’ 등 상표권 지정상품 대상을 삭제하거나 분할해 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등록 과정에서 ‘냉동 과일’,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등 당초 지적받았던 항목들이 그대로 유지됐음에도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재처 관계자는 “당시 어떤 보완 과정을 거쳐 특허가 등록됐는지 기록한 서류가 하나도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재처, 변리사, 법인 등 당사자들이 모여 구두로 협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법인 측은 “전남농기원이 알아서 등록하라고 해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름까지 가져 갔냐’고 따지고 있다”면서 “지재처 상표권 등록도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자동차보다 싼 비행기…가격은 5000만원

비행 교육 수요 감소에 수익 악화…무안공항 장기 계류 경비행기 2대 경매로 나와

경비행기 2대가 법원 경매로 나왔다.

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6일 무안국제공항에 보관중인 경비행기 2기(HL1193, HL2039)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22일 항공기 강제경매 사건을 접수받았다.

감정 결과, 두 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서 유효기간은 각각 2020년 3월과 9월에 만료됐다. 표준감항증명은 항공기의 강도, 구조, 성능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운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다.

항공기에 대한 탑재용 항공일지가 2019년 이후 작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정상 운항은 어렵다.

지난 2016년 정부 정책으로 무안·양양·울진 등에 경비행 훈련 환경이 조성돼 훈련용 항공기가 늘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수감생 감소로 공항 계류장 점유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운항이 장기 중단된 항공기들이 경매로 넘겨졌다는 게 한국공항공사측 설명이다.

해당 비행기들에 대한 매각 가격은 각각 5117만원, 1억316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15일 1차 경매(7310만원, 1억8800만원)에서 유찰되면서 가격이 낮춰졌다.



무안국제공항에 장기 계류 중인 경비행기가 법원 경매로 나왔다. <법원 경매 홈페이지 캡처>

현재 무안공항에 장기 계류 중인 항공기는 모두 4기로, 이중 2기가 지난 2019년부터 1기당 500여 만원의 계류장 점유료를 내지 못해 체납이 누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기 중 1기는 항공기 등록이 말소돼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른 1기는 임대 관계 정리를 거쳐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경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최근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비행 교육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항공유 가격과 환율은 오르고, 부품 수급난까지 겹치면서 정비조차 못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대표도서관 감리 회사 안전관리 수준 ‘미흡’

붕괴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감리를 맡았던 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별 발주청·시공사·건설사·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2025년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광주·전남지역 6개 기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안전전담 조직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위험요소 확인·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평가한 뒤 평가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공공기관으로는 광주시, 전남도교육청, 광양시, 전남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양군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고 장성군의 경우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공사 중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평가 대상은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발주청,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으로 238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尹 계엄 체포방해 변론 재개…선고는 16일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대로 오는 16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해 재개됐다.

재판부는 “탄핵증거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안 돼서 (특검에)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하고 공판을 준비했다”며 변론 재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특검 측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탄핵증거는 진술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 등이 해당한다.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고 구두로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변론이 재개된 만큼 추가 기일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살펴보고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정은 1월 16일 오후 2시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CT

알바 댄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